

자연순환농업 확산, 그 핵심은 상생과 공익성

국립축산과학원 이상철 박사

지금부터 7년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가축분뇨는 농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정부차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꾸준히 하였음에도 축산농가의 부적절한 처리, 미부숙된 액비의 살포로 인한 농경지 확보 애로, 액비의 방치로 인한 중금속 문제, 해양투기에 따른 민원 다발 등 손쓰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종농가에 제대로 된 액비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있었다. 분뇨의 문제는 주로 수분함량이 높은 양돈분뇨에 국한되었지만 다른 축종도 크게 나은 것도 없었다.

2006년 정부가 흙도 살리고 축산도 살리자는 구호와 함께 축산농가가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경종농가에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상생의 구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축협과 농협이 협약을 맺은 후 각종 작물에 적용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경종농가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특히 화학비료 보조 감축, 조사료 생산 확대 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많은 양의 액비가 사용 가능한 것도 자연순환농업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본다.

자연순환농업의 핵심 축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점 조직을 통해 정부는 양질의 퇴비와 액비의 생산 및 살포에 대한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협회’의 탄생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을 구축한 법인에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건실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나아가서 협회 차원의 정보지 발간은 협회 소속 회원의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 제공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확산 방법,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순환농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거의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규제를 통해 살포면적을 허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자생적으로 소규모 자연순환농업을 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에서는 현행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갖고 규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는 있지만 질적 내실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향후의 자연순환농업 방향은 좀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즉,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토양의 건전성 확보 및 경종농가와의 상생이라는 운동 정신과 함께, 협회 차원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로컬푸드(농민장터, 생협)와 같이 지역별 특징있는 농산물의 소비자-농업인 직거래 방식이라든지, 학교급식에 지역내 친환경 농축산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 국민과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앞으로 협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여 정보지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농가를 계도하고 나아가서 국민과 소비자에게 축산의 다원적 기능을 소개하는 공익적 매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